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50호 (2014-29) 발행일 : 2014. 07. 25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경제의 상생

고용-복지 연계산업으로 주목받는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은 전산업 대비 사업체 수와 고용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비중과 고용의 질은 낮음

반면에,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민간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규모화와 여성 고용창출, 그리고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 상승을 달성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 경제의 상생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설립지원과 더불어 시장, 전략사업, 중간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유기적인 정책연계가 필요



이철선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1. 문제제기

- (목적) 복지재정 압박과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대안으로써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배경)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등 근로자의 질이 취약하다는 비판아래 민간 자발적 생성 조직인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연구내용)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을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경쟁력을 선진국들의 정책 사례와 국내 실태조사를 통해 검토

○(사회서비스 정의) 국가·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관련시설 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12.1 개정)

- (현황) '13년 기준, 11개 부처에서 국비기준 8.4조원을 투자해 돌봄·사회참여 등 73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1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¹⁾

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사회적경제 정의) 정부 공공영역과 영리기업의 민간영역 외 제3섹터에서 지역이나 국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써 사회적 · 경제적 요소를 모두 가진 비영리조직 등을 의미(OECD)

- (현황) 2013년 기준,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약 8,400여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 별도로 보육 등 지역 밀착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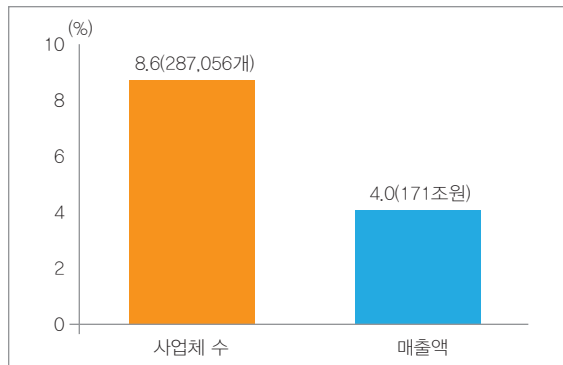
2. 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과 문제점

■ (사업체) 2010년 기준, 국내 사회서비스 사업체는 전산업 335만개에서 8.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 절반정도가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매출액 비중은 전산업의 4.0%에 불과

○(분석) 정부사업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과약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에 의거 201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결과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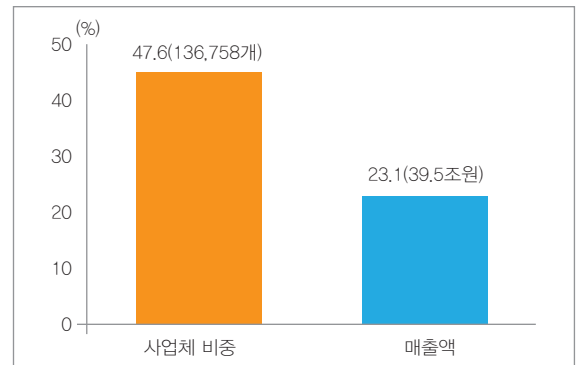
○(결과) 전산업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은 약 8.6%를 차지하나 매출액 비중은 4.0%로 상대적으로 낮는데,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47.6%인 영세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23.1%에 그치기 때문

[그림 1] 전산업 대비 사회서비스 사업체 현황



주: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

[그림 2]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개인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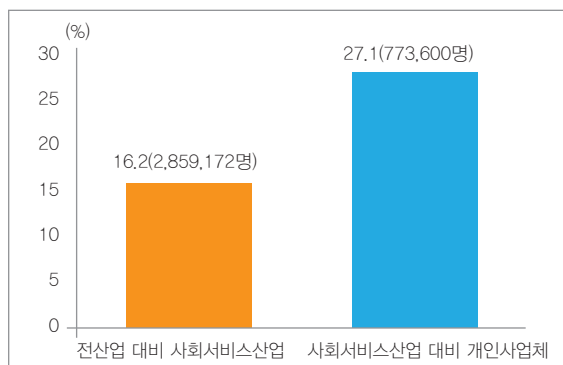


주: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

■ (고용량) 전산업 고용량 1,764만 명 중 사회서비스 산업은 약 16.2%인 286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고용량은 27.1%인 77.3만 명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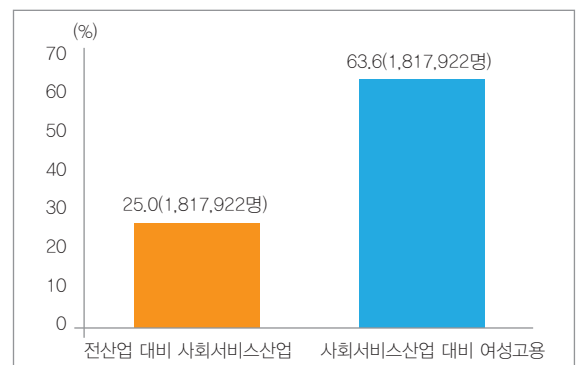
○(여성고용량) 총 고용량 286만 명 중 여성종사자는 181.7만 명으로 약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산업 여성고용량 725만 명의 25.0%를 사회서비스 산업이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

[그림 3] 사회서비스 산업과 개인사업체의 고용량



주: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

[그림 4] 사회서비스 산업의 여성고용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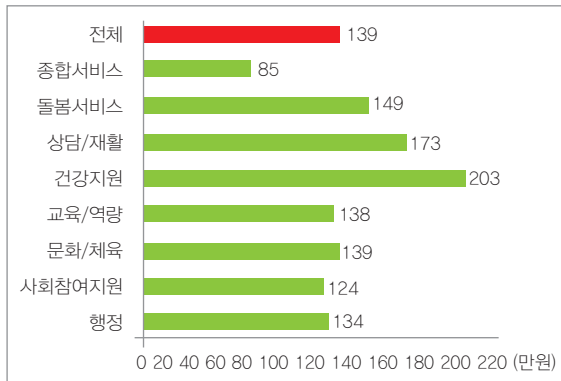


주: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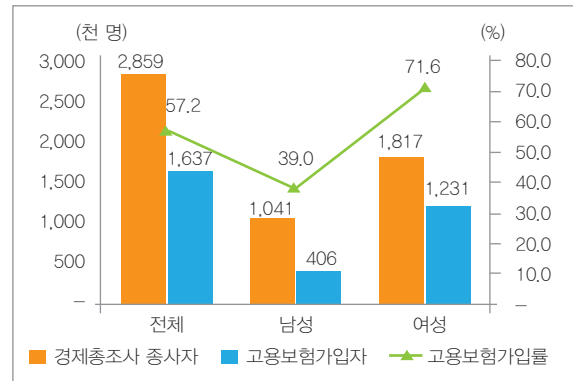
- (고용의 질)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 근로자의 월평균 초임 임금 수준은 월 139만원(2012년 기준)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57.2%(2010년 기준)로 낮음

○(분석) 월평균 초임임금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에 기록된 월평균 초임을, 고용보험 가입률은 경제총조사 재분석 결과에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에 기록된 가입자를 연계해 추정

[그림 5] 사회서비스산업 고용보험 취득자의 월평균 초임 [그림 6] 사회서비스 산업의 여성고용량 현황



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를 12년 기준하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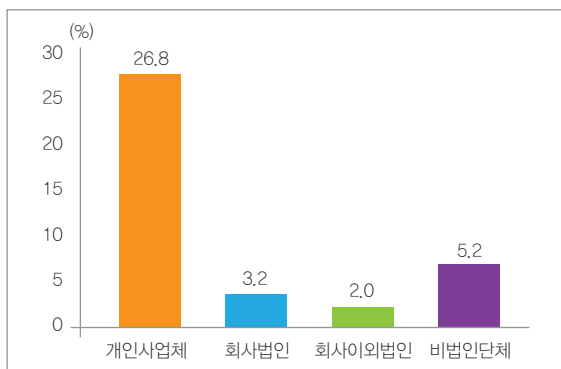


주: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

- (문제점) 타 업체와 비교하여 개인사업체들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6.8%로 높지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5%로 낮아 고용량 및 질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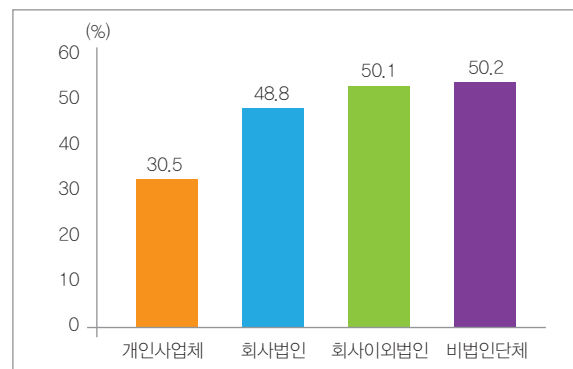
○개인사업체들의 높은 영업이익률 대비 낮은 인건비 비중은 부채상환 이자 등 영업외 비용과 당기순이익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서비스 품질 개선에 투자가 타 업체 대비 적어짐을 의미

[그림 7]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를 12년 기준하에 분석

[그림 8]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주: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

3.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사업체로써 사회적경제

- (선진국) 1970년~80년대 말 1·2차 오일쇼크로 경제가 악화되자 복지재정 감소와 여성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육성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으로 여성·장애인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연합회 등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임금 등 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상승

〈표 1〉 선진 4개국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구분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육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소외법('98): 사회적기업 도입 - 공익협동조합법('01) · 지자체의 공익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고용창출프로그램(82) · 공동육아협동조합 육성 - 사회서비스법 개정('92)으로 민간기관에게 서비스위탁과 바우처 제도 도입 -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국가지원법('01) · 지역경제성장청 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쟁입찰방식 도입('90) - 제3의길 정책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97) · 민간협력과 자산이전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법('91): 사회서비스 위탁 · 정부조달시장 우선권 부여 ·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허용 - 사회적협동조합 집중
기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기관 22만개('11) · 복지부분 3.3만개 · 협동조합 2.6만개 · 공제조합 7,422개 등 - 정부재정 의존도 5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6,497개 - 정부 재정 의존도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28만개('13) · 근로자 고용기업 7만개 · 협동조합 5,933개 · 이윤발생률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13,938개('08) · 매출액 50만유로 이상 24.1% · 정부 재정 의존도 65.9%
고용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량 232만 명('11) · 복지부분 91만 명 · 협동조합 30.6만 명 - 여성비중 약 70% · 협동조합 상용직 86.2% · 영리기관 대비 임금 113%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이 56.2% · KFO 소속 97,369명 중 복지부분 61,375명 - 19세 이하 아르바이트 임금이 영리기업보다 높음 - 민간영역이나 공무원 대비 동일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고용량 72만 명 · 일반기업 대비 규모 대 · 여성 관리자 40.1% - 협동조합 고용 22.4만 명 · 대규모 협동조합이 고용의 98%를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협동조합 고용량 115만 명 · 사회적협동조합 32만 명('08) · 여성 비중이 71.2% · 상용직 비중 76% - 연합회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결정
중간 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유형별로 전문화 · 비영리법인형: 예) 그룹 SOS · 협동조합형: 예) CGSc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산하 콤파니언 25개 운영 · 900여개 회원 · 128명 자체인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맞춤형 기관육성 · 사회적기업 담당 300여개 · 협동조합개발기구 36개 · 다양한 섹터별 기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산하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개 - 컨소시엄 형태 연합회 CGM은 별도 운영

자료: 이철선 외(201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공요인)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중시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에 전략사업, 중간지원기관, 사업지원, 시장정책이 유기적으로 가동했기 때문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서비스를 위한 비영리사업과 더불어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익발생 시,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축적하지만 특정 개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사회적 자산 개념의 조직
- (전략사업) 스웨덴은 돌봄 및 재활을, 영국은 주택과 문화 등을, 프랑스는 환경과 먹거리 등을, 이탈리아는 돌봄과 교육부분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의 주요 전략사업 군으로 육성
- (중간지원기관) 스웨덴은 정부산하기관이, 영국은 성공한 사회적기업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기관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 육성
- (사업지원) 스웨덴은 일정한도(50%)의 운영비 지원을, 영국은 지자체의 공휴자산 등 자산이전을, 프랑스는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협동조합 참여를, 이탈리아는 컨소시엄 사업 참여를 허용
- (시장정책) 스웨덴과 영국은 정부재정지원 하에 진행되는 사회서비스 사업 일부를,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사회서비스 산업의 전 부문을 개방 또는 위탁

4.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과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역량차이

- (현황)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최근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개별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립지원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질적인 지속가능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
 - (양적 현황) 2013년 12월 기준,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대표적인 4개 사회적경제 조직 수는 약 8,402개에 이르며, 금년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이후(12.12) 1년 만인 13년 12월 기준 3,336개였던 협동조합 수는 5개월이 지난 2014년 5월말 기준 4,823개로 약 44.5% 증가
 - (질적 현황) 사업연대 및 지원조직 등의 부족으로 부채비율 평균 200% 이상이 다수이며, 매출액과 고용량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간에 차이가 있고, 임금수준은 사회서비스 산업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
 - (연대사업) 일반협동조합(9.2%), 마을기업(58.5%), 자활기업(62.2%) 등 연대사업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협회 또는 연합회 가입률이 매우 낮음
 - (지원조직) 사업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의 경우 자활센터(기관 당 5.6개)를 제외한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은 1개 중간지원기관 당 77.4~283.7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담당
 - (관리 현황) 협동조합은 기재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등 각 개별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상당부분 중복이 발생
 - (중복) 인증 사회적기업 중 자활기업(115개), 장애인작업장(99개), 협동조합(24개), 영농조합법인(36개), 생협(15개), 마을기업(13개) 등이 포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12)

〈표 2〉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설립 수	· 일반: 3,225개('13.12) · 사회적: 111개	· 인증: 1,012개('13.12) · 예비: 1,537개	· 1,162개('13.12)	· 1,340개('13.12)
재무	총자본 · 일반: 2천 7백만 원 · 사회적: 1억 4천만 원	· 9천 3백만 원	· 4천 7백만 원	· 3천 7십만 원
	부채(대출금) · 일반: 1백만 원 · 사회적: 6천 1백만 원	· 2억 2천만 원	· 1억 1천만 원	· 7천 5백만 원
매출	연간 목표 · 일반: 8천 7백만 원 · 사회적: 13억 9천만 원	· 10억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2억 3천
	2분기달성률 · 일반: 26.1% · 사회적: 49.5%	· 59.3%	· 53.8%	· 57.9%
고용	피고용인 수 · 일반: 2.96명 · 사회적: 13.33명	· 29.81명	· 5.30명	· 9.23명
	임금(월) · 일반: 144만 원 · 사회적: 152만 원	· 175만원	· 131만원	· 135만원
사업	연합회가입률 · 일반: 9.2% · 사회적: 56.2%	· 77.7%	· 58.5%	· 62.2%
	지원기관 · 17개, 총 인력 34명 · 기관 당 283.7개 지원	· 18개, 총 인력 72명 · 기관 당 141.6개 지원	· 15개, 총 인력 38명 · 기관 당 77.4개 지원	· 247개, 총 1,546명 · 기관 당 5.6개 지원

주: 각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수 자료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발대식 자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무 매출, 고용, 사업 자료는 이철선 외(2013), 친서 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리

■ (역량 차이)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전국연대하에 정부 · 전국시장을 포괄하는 중견기업 수준 이상이지만,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연대하에 지역시장에 국한된 벤처기업 수준임

○(조사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재단 등 해외 100개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와 아동 및 노인 돌봄기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국내 3,065개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 (분석방법) 목표시장, 제품전략 및 개발, 사업연대, 기업내부 역량 등 4대 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비즈니스모델 발전모델 구축 후 각 수준별로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비교
- (발전단계) Bekkum(2001)²⁾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단계를 촌락형 → 틈새형 → 전문기업형 → 부가가치형 기업으로 진화하는 비즈니스 발전모델을 구축

〈표 3〉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 비교

구분	국내기관	해외기관	
협동조합 발전 단계	- 틈새형 기업모델 중심으로 발전	- 전문기업형 기업모델 이상으로 발전	
1. 목표시장	-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중심시장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 정부시장 - (사회적기업) 지역시장 + 정부시장 - (비영리법인) 정부시장 + 지역시장	- (일반협동조합) 해외 및 전국시장 - (사회적협동조합) 정부시장 - (사회적기업) 지역시장 + 정부시장 - (비영리법인) 정부시장 + 지역시장	
2. 제품전략 및 개발	- (일반협동조합) 전문제품+틈새제품 - (사회적협동조합) 전문제품 - (사회적기업) 전문제품+틈새제품 - (비영리법인) 전문제품	- (일반협동조합) 전문제품 - (사회적협동조합) 전문제품 - (사회적기업) 전문제품 + 틈새제품 - (비영리법인) 전문제품 + 틈새제품	
3. 사업연대	- (일반협동조합) 연대없음+지역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연대 = 전국연대 - (사회적기업) 지역연대 > 조합연대 - (비영리법인) 조합연대	- (일반협동조합) 전국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전국연대 > 지역연대 - (사회적기업) 전국연대 > 개별연대 - (비영리법인) 전국연대=지역연대	
4. 기업내부역량	- (일반협동조합) 상부상조 수준 - (사회적협동조합) 벤처기업 수준 -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수준 -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수준	- (일반협동조합) 대기업 수준 - (사회적협동조합) 대기업 > 중견기업 수준 - (사회적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 수준 - (비영리법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 수준	
재무	- (일반협동조합) 출자금 -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 (사회적기업) 매출액 - (비영리법인) 정부지원금	- (일반협동조합) 매출액 - (사회적협동조합) 매출액 > 기부 · 정부 지원금 - (사회적기업) 매출액 > 기부 · 정부지원금 - (비영리법인) 출자금 > 기부 · 정부지원금	
	회계	- 개별 재무제표 > 단식부기	- 연결재무제표
인사	고용인력	- 3.97~29.54명	- 50명 미만~ 2,000명 미만
	고용방식	- 조합원, 지인을 통해, 공채	- 공채 중심, 자원봉사
생산	- 자체 소량생산 > 수공업	- 자체 소량생산, 일부 자체 대량생산	
마케팅	- 소량 자체판매, 인적판매	- 특정 대량판매, 일부 개방 대량판매	
경영정보시스템	- 홈페이지/메일	- 홈페이지/메일, 일부 전략분석시스템	

자료: 이철선 외(201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III :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Bekkum, O-F. van(2001). Cooperative Models and Farm Policy Reform.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Cooperative Entrepreneurship.

5. 정책적 시사점

- (정책방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설립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모델, 시장정책, 사업연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유기적인 정책 연계가 필요
 - 지원정책은 재정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직접지원이 아니라 생태계 중심의 간접적 지원체계를 구축
- (기업모델)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규모화가 어려운 개인사업체의 단점 보완을 위해 규모화가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산을 추진
 -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특히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종사자 규모가 18.3~37.8명으로 규모화 되어있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고용의 질 또한 한국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현재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은 150여개에 불과하며,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도 전체 인증기업 중 5.8%로 미미한 바, 확산미흡 원인을 파악 후 진입장벽에 대한 제거가 요구

〈표 4〉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 비교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 규모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7,363	278,849	37.8
프랑스 (사회적경제)	58,814	1,430,969	24.3
영국 (사회적기업)	70,000	723,200	10.3
스웨덴 (사회적협동조합)	3,566	65,136	18.3

〈표 5〉 평균임금 비교(사회적경제vs일반경제)

구분	월평균임금	비교대상군	대상군 대비
한국 (돌봄사회서비스업)	136만원	213만원	63.8%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1,710유로	1,936유로	88.3%
프랑스 (사회적경제)	1,668유로	1,739유로	94.0%
스웨덴 (사회적협동조합)	24,625크로네	29800크로네	82.6%

주: 1. 4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규모 자료는 각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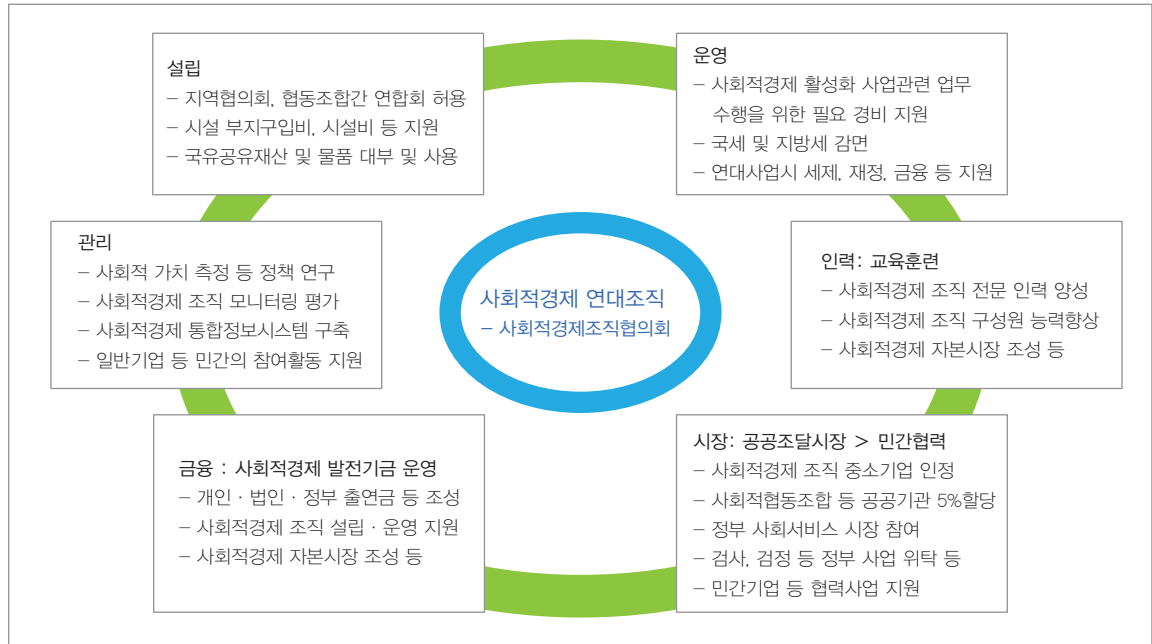
2. 종사자 처우관련 자료는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분석자가 사회서비스 특수 분류에 의해 분석한 자료임. 이탈리아는 2009년 사회적협동조합 단체협약상의 10개 직무군 중 임금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산업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과 비교한 자료임. 프랑스는 2006년 기준 프랑스 북부 노르빠드갈레 지방의 사회적 경제기관 대비 비사회적경제기관 대비 월 평균 급여(세후 급여)비교 자료임. 스웨덴은 스웨덴협동조합고용위원회가 파악한 비영리단체, 유치원 등 4개 세부업종의 사회적 협동조합 종사자 평균임금과 전산업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비교한 자료임

- (시장정책)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선권 부여를 사회적임조달제도 도입을 통해 추진
 - 비영리기관 등에 한해 인가제로 운영되던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은 시장화를 위해 2008년 노인재가장기요양 보험, 2013년 일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영리기업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등록제를 실시
 - 복지수요 증가와 시장개방으로 참여 사업체는 증가하였지만,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미결 상태
 -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들에게 공공조달시장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회적임조달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써 안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사업연대)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발적인 사업연대를 위하여 전국단위 연합회 또는 협회를 지원 하는 정책이 요구
 -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본력과 인적구성 등 전반적인 경영능력에서 주식회사 대비 매우 취약하지만, 사업 연대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그러나 최근에 설립된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짧은 역사로 인해 사업연대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국단위 연합회나 협회가 부재한 것이 사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연대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 총 6개 부문에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는 선제적인 정책마련이 필요

[그림 9]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대조직 지원 방안



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용을 분석하여 재정리

■ (관리방안)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민주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부처의 운영권한을 통합 운영 체제로 구축 후, 중앙-지자체-민간의 수평적 분권화를 추진

○개별부처에 의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관리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지원방안의 중복, 사회적경제 조직에게는 행정처리 중복 등 비효율성을 유발하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 활동무대가 시군구 등 지역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유기적 연동이 절대적으로 필요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정부의존보다는 자발적인 운영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집필자 | 이철선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의 | 02-380-8149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